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전주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전주시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15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체계적 재난·재해 안전관리 정립을 통한 안전의 일상화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 및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조성이다.

먼저 시는 도시의 성장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특히 시는 올해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도시의 계획된 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적은 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고도지구 규제 대폭 완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시는 앞으로도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기별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재난·재해 안전관리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2025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재해예방 시설, 화재 취약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시에, 과거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강해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력·조준·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



전주시는 15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한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성 및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일례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부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및 경제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홍보 지원을 위해 LED 전자게시대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옥외광고를 재해방재단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용진~우아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우아~신리 외곽순환도로 구축 △새만금~김제~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702호 국도 승격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시민

의 생활권을 더욱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고효율 LED등 교체·신설로 야간 통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퇴적토 및 잡목 제거, 조도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휴식 및 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2025년은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경관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캠페인(GBCH (Go Beyond, Create Harmony)챌린지)’에 동참하며 올림픽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전북이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우범기 전주시장은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캠페인(GBCH (Go Beyond, Create Harmony)챌린지)’에 동참하며 올림픽 유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이어 챌린지에 동참한 우 시장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 낼 담대한 도전, 전북이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주가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열정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 시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경기시설을 통해 국제 경기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나아가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내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확충해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타 시·군과 협력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연대 의식도 고취시키고 있다. 또, 전주시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홍보, 시민 참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은 전주가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정기본 등록면허세 부과

전주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8만3645건에 대한 정기본 등록면허세 28억 5217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병원 등이 있다.

올해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해(8만 2517건, 28억768만 원)와 비교해 부과액이 4449만 원(1.6%) 증가했다.

1월 정기본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고지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김욱기 기자

완산회, 지역사회 발전 위한 사회공헌 방안 논의

설맞이 성금 200만원 전달

전주시 완산구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단체·기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완산회(회장 조병두)가 지난 14일 완산구청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새해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완산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완산회가 나아갈 활동 방향을 정립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완산구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 △조순가정,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방안 △



지역 환경 정비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회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성금 200만원을 완산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성금은 관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을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여간의 임기를 마친 배희곤 전 완산회

장에 이어 새로 취임하는 완산회장(김용삼 완산구청장)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조병두 완산회장은 “지난 한 해, 완산회는 회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소중한 성과를 이뤄냈다. 올사년 새해에는 완산회가 더욱 단합하고 발전하며, 완산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완산회 회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완산구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면서, “올 한 해 완산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 명절 음식 나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이성희)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4~15일, 이들에 걸쳐 명절 음식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사랑 가득 설맞이 명절 음식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올타리봉사단 회원들은 정성껏 모듬전을 부치고 떡국떡, 유과와 과일 등을 포장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 160세대에 전달했다. 이성희 자원봉사단 회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이웃에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